

“전남도 자부담 지방비 1009억 시·군에 전가”

감사원, 2014년 이후 14개 국고 보조사업 감사 결과 5급 승진예정 과다산정·임기제 7급 무자격 채용 지적

전남도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지방비 1009억여원을 22개 시군에 떠넘겼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23일 공개한 감사원 ‘전남도 기관운영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남도가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행한 업무에서 총 36건의 위법·부당사항이 드러났다.

전남도는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해 집행하면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경우 도비 부담률이 50%임에도 30%만 부담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중 전남도 부담액이 433억 2000만원인데도 259억5000만원만 편성한 채 173억7000만원은 22개 시·군에 전가한 것이다.

이를 포함해 전남도는 2014년부터 자연환경보전시설 지원비, 공립박물관 건립비 등 총 14개 국고 보조사업의 도비 부담액 총 1638억원 중 628억6000만원만 지출하고, 1009억4000만원을 22개 시·군에 전가했다.

감사원은 전남지사에게 ‘관련 법령에서 정한 도비 부담액보다 적게 세출예산에 계

상함으로써 관하 시·군에 재정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전남도 인사 문제도 지적됐다. 도는 2013년 하반기와 2014년 상반기 인사에서 5급 승진예정 인원을 정당한 인원인 25명보다 50명 더 많은 75명으로 과다산정하고 같은 인원만큼 승진을 의결했다.

또 2016년 임기제 7급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직무 분야 관련 학위나 근무경력 등 응시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도의 고득점자(920점)라는 이유로 채용했다.

감사원은 전남지사에게 응시자격이 없는 사람을 임기제 7급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한 담당 공무원을 경정계 이상 징계하고, 재발방지 및 관련자에게 주의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구례군과 장성군에서 담당 공무원이 각각 유류대금과 하도급 대금을 잘못 지급해 구례군에 6574만원, 장성군에 8000만원의 손실을 끼친 사실도 적발해 관련자들이 나눠서 변상하도록 했다.

한편, 감사원은 전남도가 2014년 8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사업을 추진해 도서·농어촌 지역의 출산환경 개선과 저출산 극복에 기여했다며 이를 모범사례로 꼽고 감사원장 표창 대상으로 선정했다. 전남도는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에 산후조리원이 없어 해당 주민들이 인근 도시로 월정 출산하는 실정인 점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 4개소 설치, 운영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이용섭, 현실정치 떠나 성찰 시간 갖기를”

민행배 광산구청장 기자회견

민행배〈사진〉광주광산구청장이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기회주의자’로 규정했다.

민 구청장은 2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최근 사석에서 만난 이 부위원장은 출마 의지가 확고했고 원칙과 정도, 실력과 성과를 강조했지만, 그의 행보는 이와는 멀어 보였다”면서 “같은 소속 정당의 동지로서 즐거운 경향을 펼치겠지만 수긍하기 어려우면 자격 미달로 여기고 이 부위원장의 후보 낙마를 선거운동의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광주를 떠난 정치인이 광주에 필요한지 ▲일



자리 창출을 자신의 정치적 입신을 위해 활용한 것은 아닌지 ▲성과가 좋지 않은 일자리위원회에서 무책임하게 발 빼려 하는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에 대해 “기회만 있으면 자리를 엿본다는 점에서 기회주의이고 그 태도가 언제라도 손가락을 놓거나 뺄 수 있도록 그 경계에서 서성거린다는 점에서 기회주의자이다”면서 “이 부위원장이 현실정치를 떠나 성찰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설 앞두고 원산지 표시 단속 농관원 전남지원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양곡 표시에 대한 부정 유통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설을 앞두고 내달 14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 165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335명을 투입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연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 표시 등이다. 중점 단속 대상품목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한과류, 나물류, 주류(탁주 등), 수입 화훼류(국화 등) 등이다.

광주·전남지역 통신판매업체들이 판매하는 원산지 의심품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일자리 안정자금 이용 하세요”

23일 광주 북구청 기업지원과 직원들이 전남대 후문 일대 상가를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북구는 27개 동주민센터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업무 지원에 나서고 있다.

23일 광주 북구청 기업지원과 직원들이 전남대 후문 일대 상가를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북구는 27개 동주민센터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업무 지원에 나서고 있다.

23일 광주 북구청 기업지원과 직원들이 전남대 후문 일대 상가를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북구는 27개 동주민센터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업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 첨단 스마트팜 조성 등 신규사업 185건 발굴

총 재원 38조 규모 ... 내년 4908억 확보 총력

첨단 스마트팜 단지 조성, 순천만 4차 산업혁명 박람회, 중소형 선박 공동건조기반 구축...

전남도가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지역발전 동력을 될 신규사업 185건을 발굴, 국비 확보에 나섰다.

전남도는 23일 우기종 정무부지사 주재

로 ‘2019 국고 건의 사업 보고회’를 열어 185건의 사업 내용을 공유했다. 총 재원 규모는 38조원이며, 내년 국고 예산 건의액은 4908억원이다.

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 여수 화태~월호 연도교 건설, 담양 고서~창평IC 간 국지도 4차로 확장, 신안 압해~율도 연도교

건설, 여수~남해 도로(동서 해저터널) 건설, 구례~순천 황전IC 국도 4차로 확장 등이 주요 사업에 올랐다.

일자리, 농림·해양, 경제, 안전 분야에서는 전남 일자리 종합플랫폼 구축, 첨단 스마트 팜 단지 조성, 소규모 항포구 접안 시설 개선, 중소형 선박 공동 건조 기반 구축, 2021 순천만 4차 산업혁명박람회 지원 등 현안이 포함됐다.

전남도는 2월까지 사업 발굴과 논리 개발을 하고 3~5월 중앙부처, 6~8월 기획재정부, 9~12월 국회를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우기종 정무부지사는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에 꼭 필요한 사업이 빠지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오는 29일까지 계속되는 정부 업무보고와 연계해 신규 현안을 발굴해 보완하겠다”며 “소관 부처는 물론 기획재정부 관련 부서, 지역과 상임위 의원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영화 ‘1987’ 실존인물 김정남 내일 광주 온다

이병훈 위원장과 토크쇼

‘6월 항쟁 열풍’을 몰고 온 영화 ‘1987’의 실존인물인 김정남(설경구 분) 전 청와대 교육문화사회사수석비서관이 25일 광주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광주동남을지역위원장과 토크쇼를 한다.

‘1987’를 통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는 김 전 비서관은 ‘전두환의 4·13 호헌조치에 대한 전국민적 반대투쟁’을 기획하는 등 민주화운동의 산 증인이다.

‘빛·소 포럼’(대표 최함)은 23일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김 전 비서관을 광주로 초청해 25일 오후 2시 광주시 남구 광주영아방송국 공개홀에서 한국 민

주주의가 걸어야 할 길과 문제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을 주제로 이병훈 지역위원장과 대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시장 출마의사를 밝힌 이 위원장은 지난 1993년 김영삼정부에서 김 전 비서관과 함께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인연을 쌓았다.

이번 대담에선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광주선대본부장으로 활동했던 이병훈 위원장과 김 전 비서관이 지난 시절 민주화운동 이야기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또 5·18광주민중화운동 이후 한국 민주화운동을 이끌어 온 광주의 지방정치에 대한 생각도 주고받는다.

/오광록기자 kroh@

전남도, 청령도 바다권 탈출 안간힘

반부패·청렴 종합대책 발표

전남도가 청령도 바다권 탈출을 위한 반부패·청렴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가 발표한 반부패·청렴 종합대책은 4개 분야, 44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밝고 맑은 공직문화 정책 12개, 부패 제로 환경 조성 12개, 도민 참여 청렴 문화 확산 12개, 반부패·청렴 활동 강화 8개 등이다.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실·국장들이 참여하는 종합 추진단을 구성한다. 부서 순회 간담회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자가학습 시스템도 가동하기로 했다. 시·군·출자·출연기관 시책과 민원 만족도를 측정하는 ‘청렴 해피 콜’, 공직자 부조리를 익명 신고하는 ‘청렴 신문고’도 운영한다.

전남도는 공사·용역계약 업체, 보조금 수급 단체와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고

시·군,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도 구성한다.

엄정한 신상필벌을 위해 청령도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과 기관에는 포상을 강화하고 금품·향응 수수에 연루된 공직자에게는 원스토타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면서 상급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박준수 전남도 감사관은 “공직자는 물론 도민들도 감시활동을 통한 반부패 청렴 문화 실천의 주체”라며 “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소통·공감해 부패의 싹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남도는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2015년 16위, 2016년 최하위인 17위를 찍었다. 지난해 13위로 올라섰지만, 여전히 바닥권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전용 보청기
- 보청기 테스트 &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오픈 1주년
기념 이벤트
지금 연락주세요

의료광고심의필 제 170630-증-83294호

척추관 협착증
허리디스크
목 디스크
“척추 중점 치료합니다”

비수술, 부분마취, 척추 수술!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 하시면 빠른시간 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마음으로 다가오는
첨단우리병원